

투데이 칼럼

모병제 도입, 안보상황과 국민공감대가 우선

병역은 광의의 개념으로는 군사력 구성을 위한 국민의 인적부담이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는 경우에 국민은 군의 구성원으로 군에 복무할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안보차원에서 병역은 비군사적 분야에서 국가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법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의무는 기본적 국민의 특권적 의무로 존중되어온 존엄성, 자기희생적 충성심과 고도의 윤리성, 주인의식에 입각한 민주성, 국가의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일반성과 국민들의 공감성 등이 특징인 것이다.

국가의 군사력은 우선적으로 병력이 꼭 필요하며 충원방법으로는 법적 강제성에 따라 의무병 제도, 징병제도, 혼합병 제도로 구분되며, 먼저 의무병제도는 국민개병주의라 부르며 개인의지와 상관없이 법률에 의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징병제와 민병제로 나눈다.

징병제는 대부분 분쟁의 위험이 있는 국가, 정부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민병제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김호연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매년 군사교육을 연마하고 유사시 동원소집으로 전사체제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반면 지원병제도는 자유병 제도라 부르며, 스스로 지원복무 하는 제도로서, 모병제는 본인 자유의사에 의한 국가와 개인의 계약으로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이고, 용병제는 일정 한 급여와 복무연한을 계약하고 복무하는 고용병 제도로서 기술자적 소지자가 자원하여 입영하는 제도이다.

최근 정부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나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모병제 공론화를 언급하였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북한의 위협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한국 국방 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를 볼 때 모병제 적용 시 병력규모는 15만~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이미 밝혔다.

해과 미사일을 완성한 북한의 안보위협이 한층 가중되어가는 상황에서 2022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감소되는데 2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남자아이 출생 추세라면 유지할 수 있는 병력은 40만명을 넘기기 어려운 계산이 나온다.

물론 모병제의 장점은 개인자유와 사생활, 자율선택과 권리 보장, 지휘통솔용이, 구타가혹행위 감소, 적성 및 특기선택으로 전투력 향상 등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반면에 단점은 전투력유지의 불균형 우려, 국가재정부담 증가, 지원자 부족 시 대책곤란, 빈부에 따른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모병제와 징병제가 공존하는 혼합시스템이다. 즉 사병은 징병제이고 장교와 부사관은 모병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장교 7만 5000명, 부사관 12만7000명, 사병 37만 7000명으로 간부 대 사병 비율이 3:7 이지만 향후 간부 대 사병비율이 4:6 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부사관을 15만 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여군비율을 현재 2.5%에서 8.8%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필자도 일단 모병제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체적 방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된다.

128만명의 북한정규군과 특수부대, 기공할 비대칭전력을 구비한 북한군과 대처해야하는 절박한 환경에서 징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병역지원간소를 예상한 미래를 대비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나 정치적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여기에 동요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안보는 일시적, 부분적인 환경변화에 틀을 보여주는 절대 안 된다. 우리의 병역제도는 기본을 튼튼하게 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한 모병제 도입에 대하여 단계별 신중한 검토와 국민공감대가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

농촌 관광의 패러다임 바꾸기

전북도가 농촌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꿀 모양이다. 기업 워크숍도 갖고 세미나 행사도 유치하면서 타 지역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뛰고 있는 것이다. 쇼핑 기회며 휴식 공간을 제공해 전북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의 그같은 패러다임 바꾸기 시도는 삼락 농정의 성공과 맞물려 앞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래서 여기 생각나는 것이 있다. 저번에 전북발전연구원이 농촌의 상황을 보고했던 내용이 그것이다. 그때 본보는 사실을 통해 별로 놀랍지도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농촌마을 여섯에 하나 꼴로 소멸 위기라는데도 그랬다. 그때 그런 보고를 처음 들었다면 화들짝 놀랐을 터이다. 그런데 그같은 소식에 놀라지 않는 이유는 뚜렷했다. 농촌 소멸 위기 소리를 하도 여러 번 들어왔던 까닭이다. 그래서 전북도가 이번엔 농촌 관광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한 것에 격려와 지지의 성원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여기 또 짚어 볼 것이 있다.전북도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때때마다 발표한 바 있다. 삼락농정의 성공과 사람들이 찾는 농촌 실연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말이다. 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촌생활 개선 등 68개 사업에 2,38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것도 생각난다. 그때 전북도는 농촌 관광객 1백만 명을 밀었다. 그런데 그후민족화한 민한 수준의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농가 소득이 올랐는지 농민들의 말로는 체감이 미미한 까닭이다.

전북도는 농촌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농촌에 해당되는 풍경은 아니지않다. 농촌 인구가 늘지 않고 있음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현상 유지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게 여전히 희망 사항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은 매우 절한 일이다. 우리 전북은 전통적으로 한국 최고의 농도였다. 그러므로 그 이름값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전북도에 당부하고 싶다. 농촌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멋있게 전개해 놀라운 성과를 반드시 보여주기 바란다.

인구 감소 추세 내버려둘 작정인가

전북도는 인구 감소 추세를 고민해야겠다. 올해도 한 달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다. 지금쯤 도내의 여러 현상이 보고되고 있을 터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도 어려운 것들이 산적해 있을 터이다. 그래도 전북도는 희망의 근거가 돼줘야 한다. 희망의 근거가 되어주지 못하면 인구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 전북도가 노력하고 있다지만 현재 경제 수위와 거리가 멀다. 그래서 군산 인구 보존 효과라는 게 아직은 미미하다. 명신공장이 전기차 생산으로 군산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정부가 속도감 있게 도와줄 지는 미지수이다. 고용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계단지 군산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남민 쪽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전력투구해야 한다. 전북도는 저번에 투 트랙 전략으로 돌과구를 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게 아직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도민들은 마음이 착잡하다. 전북도의 그 전략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지 확인해줄 일이다. 도민들은 거듭된 경제 위환으로 불만이 가득하다. 바라는 일자리 창출은 적고 오히려 있는 일자리

마저 계속해서 줄고 있으니 왜이니 그러겠는가.

전북도는 힘을 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해결해야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전력투구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 골칫거리가 산더미라서 업무가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북도는 팔소매를 걷어부쳐야 한다. 전북도는 자존을 말하고 제후 찾기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이다. 저번에도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이런 식이라면 곤란한 일이 계속될 터이다. 그 곤란한 일이란 바로 인구 감소의 고착화 현상이다.

도민의 비판과는 반비례하여 우리 전북 지역은 늘 일자리가 부족하다.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전북도가 이루어낼 목표는 뚜렷하다. 군산형 일자리와 남민형 일자리 지원을 정부로부터 무수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는 도내 언론사들의 인구 동향 보도에 민감해야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이미 수천 명의 인구가 유출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짐작컨대 그 후에도 많은 인구 유출이 있었을 터이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180만 명대 턱걸이를 위해서라도 평가를 보여주어야겠다.

독자재언

부모님께 안부전화 한통으로 교통사고 예방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0.1%이던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해마다 2~3%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53.5%에 이르는 등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 사망률은 70대가 53.9%로 가장 많았고, 65~69세 30.9%, 80대 14.8% 순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노인 사망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고령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노인분들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지금의 교통문화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노인들은 순발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 위기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식별능력 또한 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맞춤형 교육'으로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대학, 정자 등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교육 중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길을 건널 때 반드시 좌·우를 살피기, 횡단보도와 신호를 준수하기, 야간 보행 시에는 밝은 옷을 입고 다니기 등의 이야기를 끊임 없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보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아마도 자식들의 '안부전화' 한통이 아닐까 싶다. 오늘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차 조심하세요!" 라고 안부전화 한통 드려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자식들의 진심어린 말 한마디가 부모님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지원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빛으로 펼쳐진 독일 크리스마스 정원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동부 드레스덴 근교의 필나츠 공전 공원에서 크리스마스 정원이 공식 개장해 한 방문객이 빛 조형물 앞에서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8만㎡의 크리스마스 정원에는 100만 개 이상의 전등과 25개의 빛 조형물이 설치돼 2020년 1월 5일까지 아름다운 이경을 선사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featuring a graphic of a ship on waves and the slogan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ity that provides courage and hope). It includes a commitment to quality journalism and local focus.